교회의 정관 제정과 운용의 기본 방향에 대하여

조영길 본지 편집위원으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지방법원 판사,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거쳐 2000년부터 현재까지 아이앤에스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를 역임하고 있다. 노사관계 개선 자문, 인사 및 노동법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다. 저서로는 〈노사관계 개선의 바른 길 1,2〉(2011)이 있다.

머리말

인간의 단체조직에는 바른 운영 기준을 정해 놓은 규범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그 단체의 규약 내지 정관이라 부른다. 교회도 인적 단체조직으로서 그 운영에 대한 바른 기준을 정하는 정관이 필요하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따라야 할 최고의 권위 있는 규범은 성경이다. 그러나 성경은 교회의 바른 운영에 필요한 수준으로 구체화된 규범 내용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고 있으므로 교회의 실질적 운영에 도움이 되는 정관의 제정 및 운용이 필요하다.

교회는 예수님 승천 이후인 창립 초기부터 수많은 분쟁들에 직면해 왔으므로 교회 운영 관련 분쟁들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교회가 직면하는 수많은 분쟁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다루기 위해 가장 권위 있는 규범인 정관을 제정하고 이를 바르게 운용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에 교회 정관의 제정과 운용에 있어 유의해야 할 기본 방향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정관(교회법) 제정을 인식하는 기본 관점: 정관은 사람들이 만들어 내는 것인가? 사람들이 올바른 진리를 발견하여 성문화하는 것인가?

단체의 정관은 그 단체를 다스리는 가장 권위 있는 규범으로 일종의 법이다. 생명체들 중에서 오직 인간만이 법을 제정하고 이를 지켜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 법의 제정은 크게 다음의 두 가지 기본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법이 인간의 필요에 의하여 만들어 낼 수 있는 기준이라는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의 의사와 관계 없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정의로운 기준을 사람이 겸손히 발견하여 성문화하는 것이라는 관점이다.

법을 인간이 자신들의 필요나 유익을 위하여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인식하는 관점은 인간의 필요나 유익에 따라 법을 제정해도 된다는 관점으로 이어져 결국 법치(法治)가 아니라 인간의 필요나 유익을 법보다 우선하게

되는 인치(人治)로 귀결된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법의 제정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성도들이 교회의 정관을 이같이 세상적 관점으로 대하게 되면, 정관을 어떻게 만들어야 자신들에게 유리한가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그 결과 정관을 바라볼 때 담임목사나 교역자들에게 유리한 정관, 장로들에게 유리한 정관, 집사들, 성도들에게 유리한 정관 등으로 분류, 평가하는 입장을 가지게 된다.

정관의 제정 및 개정(이하 통칭하여 제정이라고만 한다)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수많은 분쟁들은 본질적으로 정관을 인간들의 필요나 이익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인본적이고 당파적인 정관관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본적 당파적 정관 인식은 교회의 주인은 마땅히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관점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반면 법을 인간의 유불리나 필요에 관계 없이 인간의 능력과 무관하게 실재하는 정의로운 기준이라고 보면, 인간이 할 일은 겸손히 공의로운 법을 발견하여 이를 성문화하는 것이 된다. 이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이나 필요보다 올바른 법을 우선하는 법치로 귀결되고,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공의로운 법의 다스림으로 연결되어 예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교회관에도 부합한다. 교회의 정관을 제정할 때 그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정관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관 제정에 관여하는 모든 성도들은 자신들의 필요나 유익을 우선하려는 관점들을 십자가 위에 완전히 못 박고 성경을 기초로 성령 안에서 무엇이 교회 운영에 적용되어야 할 공의로운 기준인가를 겸손히 탐구하며 함께 발견해 나가는 데 집중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정관 제정 및 운용의 기본 동기: 자기나 집단의 유익을 추구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것인가?

실제로 교회의 정관을 제정하면서 성도들 간에 이견이 생길 때 각자의 견해의 근본 동기가 바르게 놓여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정관에 대한 의견의 근본 동기가 자신이나 사람들(목사, 장로 등 교역자나 직분자들)의 유익함과 영광을 추구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인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교회의 정관 제정 과정에서 목사, 장로 등 사람들의 불순한 이익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순전한 공의가 주도하도록 기도하고, 의논 협의 과정에서도 불순한 인간적인 계산들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사결정조직의 구성 원리: 신뢰와 협력인가? 불신과 억제인가?

교회의 구성원인 모든 성도들은 진정한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거룩함을 일생 동안 지속적으로 성장시켜야 할 과제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 교역자, 직분자, 일반 성도 모두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교역자를 비롯한 성도들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다가도 그 다스림에 따르지 않을 때도 발생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정관에는 교회의 의사결정조직들인 공동의회, 제직회, 당회, 담임목사, 감사(위원회), 각종 위원회 등의 구성원들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는 신뢰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지만, 성령의 다스림을 벗어나는 상황에서는 더 상위의 의사결정조직이나 다른 의사결정조직에 의해 불신과 억제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명확하게 마련해 두어야 한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교회를 다스리는 권한을 행사하는 교회의 모든 의사결정조직 구성원들은 누구라도 자신들의 유익 등을 위해 성령의 다스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교만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있음을 겸손히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성령에 어긋나는 사람은 다른 조직이나 성도들에 의해 불신 받고 의사결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들을 충실하게 정관에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모든 교회의 직임은 정년까지 보장되는 종신제보다는 일정 기간의 임기제 내지 재신임제로 정하는 것이 인간들이 빠지기 쉬운 교만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또한 담임목사를 비롯한 교역자들, 장로를 비롯한 직분자들의 청빙이나 임직 조건과 절차뿐만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에 벗어날 경

우를 대비하여 정당한 해임 사유와 그 절차 역시 명확하게 해 두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교회 의사결정의 사안들이 중요할수록 특정 개인이 단독으로 결정하게 하기보다는 더 많은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의사결정기구에서 논의를 거쳐 최종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교회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양대 권한은 인사권과 재정권이다. 특히 담임목사를 비롯한 교역자들의 선임권과 해임권, 보수 등의 결정권, 그리고 교회 각종 사역의 예산 편성권과 결산 승인권이 실무상 중요해진다. 따라서 교회 운영의 인사권과 재정권이 각종 의사결정기구들의 충분한 심의를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되도록 하는 내용들을 정관에 규정해 두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잦은 정관 관련 분쟁은 교회 의사결정기구 중 가장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담임목사나 당회의 의사결정권이 남용되는 경우들이다. 특히 한국 교회에서는 많은 경우 담임목사가 공동의회, 제직회, 당회 등의 의장까지 겸하고, 주요한 인사 및 재정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며 각종 예배의 설교권까지 보유토록 함에 따라 개인으로서는 가장 강력한 의사결정권을 갖게 된다. 따라서 담임목사와 담임목사 편의 당회원들이나 제직들이 교회 운영에서 성령의 다스림에서 어긋나는 의사결정을 하고 실행하려 할 때 이를 다른 의사결정 조직이 성령의 다스림에 따라 공의롭게 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명확히 구체화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이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인 담임목사 임기제 내지는 재신임제, 담임목사 해임 방안, 담임목사의 재정 및 인사에 대한 부당한 관여 억제 방안들을 정관에 명확하게 구체화할 때, 이를 수용할 것인지의 여부가 정관 제정 과정에서 가장 심각한 고비가 된다.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라도 교만해져서 성령의 뜻을 거스를 수 있음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기초 위에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자신들이 혹시라도 교만해질 때를 반드시 상정해서 성령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들이 정관에 충분히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실행조직의 구성 원리: 사제주의인가? 만인 제사장주의인가?

교회는 많은 사역들을 실행하게 된다. 교회의 모든 사역을 실행할 때 목사 등 교역자들이 주도해야 한다는 관점은 상당히 뿌리 깊은 고정 관념이다. 교역자와 평신도를 나누어 교역자에게 실행의 주도권을 넘기려는 사제주의적 관점은 교회의 수많은 사역들에서 평신도들의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기 어렵게 만들고, 교회 운영을 비전문화 내지 비효율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교역자나 일반 성도들의 구별 없이 각자 동등하게 서로의 은사를 존중하며 함께 협력하는 관점으로 실행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교회 사역 중 예배나 양육 등은 교역자들이 주도하도록 하는 반면, 재정, 총무, 구제 등은 일반 직분자들이 주도하도록 구성하되, 모든 사역들마다 교역자와 성도들이 협의하여 실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관 제정의 바른 절차

올바른 정관의 제정은 올바른 제정 절차를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 정관안을 마련하는 조직을 성령 충만하고 전문성이 있는 성도들로 비교적 소규모로 구성한 후, 정관안 수립기구 구성원들이 상당한 시간을 두고 좋은 정관에 대한 깊은 연구, 조사, 기도와 토론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정관안이 마련되면 담임목사가 참여하는 당회나 운영위원회는 성령 충만을 구하며 충실한 심의를 해 가되, 이 과정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의 관철 시도를 억제시키고 온전히 거룩한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바른 교회 운영 원리를 하나하나 토론 등의 과정을 통해 발견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합의되지 않는 안건들은 압도적 다수의 결의로 통과될 때까지 시간을 두고 의논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옳다. 정관 제정 과정에서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신비롭고 바른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관안이 당회나 운영위를 통과하면 제직회 그리고 공동의회에서 이를 상세히 설명하고 제직회 및 공동의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 압도적 다수(통상 투표 참여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느 법이든 그 제정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앞세우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교회 정관 제정 과정도 동일하다. 따라서 정관 제정 논의 과정에서 불순한 인간적인 계산에서 비롯되는 의견들에 대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지혜롭게 분별하여 온유하되 단호하게 대적하며 성령의 다스림에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할 때까지 때로는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 이러한 의논 과정에서 지혜롭지 못한 생각들, 이기적인 생각들, 성령이 인도하지 않는 많은 부적절한 내용들이 걸러지도록 해야 한다.

정관의 해석 적용 기구 운영에 대하여

아무리 정관을 치밀하고 꼼꼼하게 만들어도 교회는 정관의 해석과 적용하는 과정에서 견해가 나뉘는 문제들을 경험하기 마련이다. 정관의 올바른 해석과 적용을 위해 교회 조직 내에 이를 담당하는 기구(예를 들어 법규위원회, 중재위원회)를 두고 이를 성령 충만하고 또 전문성이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운영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 성령 충만함 속에서 정관을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해석 적용하는 과정이 성령 충만함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못지 않게 중요하다.

마무리

교회 정관의 제정과 운영 과정이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갈림길은 이를 담당하는 담임목사를 비롯한 교역자들이나 성도들이 얼마나 성령의 순전한 인도함을 받아서 자신들의 불순한 계산적인 이익 추구 욕구를 내려 놓느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교회 정관의 제정 및 해석 적용에 참여하는 담임목사를 비롯한 교역자들이나 장로들을 비롯한 직분자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령의 다스림을 구하고, 자신들의 불순한 인간적 유익이나 영광 추구욕을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그래야 정관의 제정과 해석 적용 과정이 순전한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이루어지고 주님께서 진정 머리가 되시는 성경적 교회의 운영이 가능해진다. 특히 담임목사나 영향력 있는 장로들일수록 교회 정관에 자신의 유익이나 영광 추구욕을 담으려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자칫하면 교회를 다스리는 바르고 거룩한 기준인 정관 제정과 운용을 자신의 불순한 유익이나 영광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전락시켜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많은 성도들이 바른 정관의 제정, 해석 운용 과정에서 성경의 바른 기초 위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는 것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한다.

※ 본 칼럼은 국민일보와 함께 연재합니다. (국민일보 와이드면 월드뷰 2015.9.12일자)